

광주교육청, 교육환경보호 관리 허술

6887회 점검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 8건

학교 부근 변종업소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광주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부근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6887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8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유비방'이 학교와 고작 50m, 51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 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유를 판매하거나 판매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어 이동·정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조승래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유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69개 유비방 중 22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해 고발 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유비방이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단속은 경찰의 소관

이다', '점검은 낮에 하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뉴스1



가마우지 '생존 경쟁' 민물 가마우지들이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있다.

올겨울부터 초미세먼지 최고경보 맨 '車 강제2부제'

정부가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최고경보가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증차·연장운행 등 교통대책이 추진된다.

1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관계기관 별 실무매뉴얼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먼지 크기(PM)가 2.5㎛ 미만인 초미세먼지다.

이번 매뉴얼은 초미세먼지 최고 수준인 '경계'와 '심각' 경보 시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 재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

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경보 때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며,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의 경우 오늘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 내일 75㎍/㎥ 초과 예상이다.

'주의' 경보 발령 기준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를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은 △15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75

㎍/㎥ 초과 예보(주의) △2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150㎍/㎥ 초과 예보(경계) △4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200㎍/㎥ 초과 예보(심각) 등이다. 경보는 개별 시도 별로 발령한다.

올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뒤 환경부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일반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이번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황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기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준한다.

환경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다"며 "가과 별 실무매뉴얼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매뉴얼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전국 모의훈련을 다음 달 중 2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광주 공원 잔디밭 야생진드기 '서식 無'

광주시 공원지역 내 잔디밭과 산책로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을 유발하는 참진드기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 초까지 광주 지역 공원 10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참진드기 서식조사를 한 결과 공원 내 잔디밭, 수목, 산책로 주변에서 채집되지 않았다.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공원 대부분이 주택지역에 있어 공원 잔디 관리가 철저하고 산책로 정비가 잘돼 참진드기 숙주인 야생동물의 서식이 어려워 참진드기가 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원 3곳의 산책로·잔디밭과 이어지는 옆 야산 무덤과 숲속에서는 참진드기가 채집됐다.

채집된 참진드기에 대한 SFTS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돼 병원체를 보유한 참진드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공원 대부분이 주택지역에 있어 공원 잔디 관리가 철저하고 산책로 정비가 잘돼 참진드기 숙주인 야생동물의 서식이 어려워 참진드기가 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슈 판결

'룸살롱황제 밀착·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 1심서 징역2년 선고

마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환 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박모씨(55)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억255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성매매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는 다른 공범들과 여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의 도피를 돕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마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7억661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이모씨에게도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와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 영업규모 역시 작지 않다"며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을

해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3년 도주했다. 잠적기간에는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단속 때에는 마지사장들이 박씨 대신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았고, 박씨는 마지사장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업소를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마지사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성매매 알선 범행엔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첫 적발에서는 범칙금 처벌 정도로 끝날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로 주고 단속정보를 미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장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성애선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